

국힘 2차 경선, 찬탄 2 vs 반탄 2... 토론회 치열한 공방 예고

尹 탄핵 반대 김·홍, 찬성과 안·한...한덕수 출마론엔 3대 1 구도
오늘부터 26일까지 1대1 토론 등 4회 열려...당심·민심 향배 주목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가나다 순) 후보 등 4명으로 압축되면서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특히 24~26일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1대1 토론과 한 차례의 4인 토론이 당심과 민심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반(反)이재명 빅테트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출마론을 두고 후보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윤 전 대통령 관계 설정은 탄핵소추 찬성·반대 입장파와 맞물리며 '반탄파'와 '찬탄파' 간 2대 2 구도로 전선이 형성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두고 반탄파인 김·홍 후보는 관계 단절에 부정적이지만, 찬탄파인 안·한 후보는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일각의 윤 전 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 김 후보는 "책임 없는 정치", 홍 후보는 "시체에 또 난도질하는 그런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반면, 안 후보는 "전직 대통령을 방어하는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한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을 과거로 보내드리고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다.

다만 안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공개 촉구하는 반면, 한 후보는 자신의 당 대표 시절 제명 추진을 언급할 뿐 탈당을 촉구하지는 않고 있어 온도차가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탄핵 찬성 여론이 높았던 만큼 찬탄파는 본선 경쟁력과 연계해 반탄파를 향한 공세에 화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은 보수 전체의 뼈아픈 역사"라며 다른 후보들에게 대국인 사과를 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선 출마론을 두고선 홍·한·안 후보는 출마 자체에 부정적이고, 김 후보는 열린 태도를 유지하며 3대 1 구도가 형성되었다.

홍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한 대행이 출마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고려 대상 자체에 넣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KBS 라디오에서 "한 대행은 지금 관세 전쟁의 상황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고 그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선 출마보다 무역 문제 등 중요한 사명이 한 대행에게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 캠프의 김재원 미디어총괄본부장은 SBS 라디오에서 한 대행 출마론에 대해 "어쨌든 나오시라. 나오면 우리가 단일화 제안을 해서 함께 가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이재명 빅테트론"도 토론회 주요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김 후보는 한 권한대행을 빅테트 구성의 핵심으로 보고 국민의힘 최종 후보 확정 후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와 안 후보는 빅테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빅테트 내 한 권한대행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홍 후보는 라디오에서 "빅테트를 치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예비후보"라고 했고, 안 후보는 "누구도 배제할 생각이 없지만, 한 권한대행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빅테트론에 대해 "모든 분과 같이 정치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지금은 경선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에서 김문수(왼쪽부터),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가 손뼉말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광주 군공항 이전, 범정부 협의체서 빅딜”

한국지방신문협회 대선후보 공동 인터뷰 - 민주당 김동연

광주, 대표 AI·모빌리티 도시 조성
‘경제 대연정’으로 불평등 극복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 “범정부 공식 협의체를 만들어 빅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본인의 경선 캠프 사무실에서 광주일보 등 9개 지역 대표 언론사 모임인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지역 공약 등을 공개했다. 또 광주의 인공지능과 전남의 재생에너지 활성화 대책 등도 소개했다. 다음은 김동연 지사와의 일문일답.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해법은.

▲민·군 공항 이전 및 활성화를 위한 빅딜을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 임기 내 국방부, 국토교통부, 광주시, 전라남도, 이전 후보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범정부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 방향을 모색하겠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모두가 동의하는 이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광주·전남 지역 핵심 공약은.

▲광주를 대한민국 대표 인공지능(AI)·미래 모빌리티 대기업 도시로 조성하겠다. 이를 위해 AI 콘텐츠 비즈니스타운을 구축하여 AI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광주 빛그린국가산단과 미래차국가산단 일원에 AI와 모빌리티 융합 기반의 기업도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은 서해안 RE100 라인, 신재생에너지벨트를 조성하겠다. 기후산업에 총 400조 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인데, 이를 전남을 비롯한 서해안에 집중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두 번째 대선 도전이다. 각오는.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다. 민생경제는 도탄에 빠졌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눈물마저 말랐다. 거기에 더해 프랑프탈 관세로 위기가 가중되

었다. 사회·정치적으로는 국민들이 양쪽으로 나눠 갈등구조가 극에 달했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경제’와 ‘통합’이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란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을 해소해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경제 전문가로서 최우선 경제 과제는.

▲현 시점에서 최우선 과제는 트럼프발 관세폭탄에 대응하는 것이다. 나는 트럼프 2기 정부와 상대할 우리 측 대표를 지정해서 통상·투자 등을 포함해 대외 경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 대사’ 임명을 주장한 바 있다.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한시적 폐지해 수출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추경을 넉넉하게 편성해 관세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경제 대연정’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이제는 ‘성장’만 따로 물을 수 없고, ‘분배’도 따로 물을 수 없다. 같이 물어야 한다. 답변도 같이 해야 한다. 성장·분배가 선순환을 이루는 동반성장이어야 한다. 신속하고 과감한 5대 빅딜로 ‘경제 대연정’을 성사시켜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 불평등 극복을 위한 ‘기회경제’ 빅딜이며 서울공화국을 해체할 ‘지역균형’ 빅딜이다.

-미국 방문 과정에 성과가 있었는지.

▲대선 출마 선언 직후 2박 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선거운동 기간을 줄여가면서까지 그런 결정을 한 것은 그만큼 우리 자동차 부품업체가 처한 현실이 위중했기 때문이다. 그레첸 워트머 미시간 주지사와 협의한 결과, 4가지 사항의 합의에 이르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대통령 임기 분권형 4년 중임제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로드맵은.

▲개헌을 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 불법적인 계엄을 예방하기 위해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승자독식, 제왕



적 대통령을 가능하게 하는 현행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 국민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선과 총선의 시기를 맞추는 게 좋겠고, 그러자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여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자기희생적 결단을 해야 한다. 나는 딱 3년동안 대통령을 할 생각이다.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전략과 비전은.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교육이 중요하다. 정부와 기업, 시민이 더이상 서울공화국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 아래 ‘지역균형 빅딜’을 이뤄내야 한다. ‘10개의 대기업 도시’ 설립을 약속한다. 대기업을 지역으로 이전토록 해 첨단 경제도시를 10개 만드는 것이다. 일본의 도요타시가 대표적 사례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하겠다. 10개의 대도시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세우면 서울대들에 파격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오광록 기자 kroh@

대법 이례적 속도전...선거법, 대선 전 결론?

이재명 후보 상고심...전원합의체 오늘 두번째 속행기일 진행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에 대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지정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후보의 정치적 행보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법원은 23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 전 후보 선거법 사건의 전원합의체 속행 기일이 24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합에 회부하고 첫 심리까지 진행한 데 이어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추가로 잡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매월 셋째 주) 심리를 열고 속행기일은 언제든 잡을 수 있지만 이런 사건 속도는 이례적으로 통상 전원합의체 심리 과정에 비해 너무 빠르다는 평가다.

통상 사건의 경우 재판연구원들의 검토와 대법관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다.

결국 이번 사건에 관해 연구관들의 검토와 대법관 보고 절차가 미리 진행됐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원합의체는 전남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

약 대법관의 회피 신청을 받아들였다. 결국 사법행정을 이끄는 법원행정처장도 제외돼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12명의 대법관이 심리하게 됐다.

대법원의 예상 가능한 결론 시나리오는 상고 기각(무죄 확정), 파기환송(유죄 취지), 재판 정지 선언 등 크게 3가지가 거론된다.

상고 기각과 파기환송은 선고가 진행된다는 것을 감안했을 경우지만, 대선 전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절차 진행에 관한 결정 형태로 ‘재판 정지’를 선언하는 방안이 제3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선고를 하면 2심 판결과 상고이유서, 답변서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상고 기각으로 무죄를 확정하거나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게 된다.

하지만 선고가 연기 되는 과정에서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규정(헌법 84조)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73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공고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 발전사업개요**
 - 발 전 소 명 : 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소
 - 발전소 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내양리 1712-7 의 1필지 (총 2필지) (내양리 1712-7, 1712-5)
 - 발전소 면적 : 9,159㎡
-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 발 전 용 량 : 998.75[kW]
 - 사업개시예정일 : 2028년 01월 이후
 - 사업운영기간 : 2028.02.01.-2048.01.31. (20년)
-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 (주)태양광발전 대표자 정택환
- 주민의견 제출**
 - 기 간 : 2025.04.24.-2025.05.07(14일)
 - 의견제출방법
 - 전 화 : 02-6251-8012 팩스 : 02-6251-7777
 - E-Mail : minikim@soulenergy.co.kr

※ 해당 사업관련 자료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료열람을 하실 수 있으시며 이동이 불편하신 경우 저희가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공고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 발전사업개요**
 - 발 전 소 명 : 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소
 - 발전소 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내양리 1712-5 의 1필지 (총 2필지) (내양리 1712-5, 1712-3)
 - 발전소 면적 : 7,794㎡
-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 발 전 용 량 : 998.75[kW]
 - 사업개시예정일 : 2028년 01월 이후
 - 사업운영기간 : 2028.02.01.-2048.01.31. (20년)
-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 (주)태양광발전 대표자 정윤식
- 주민의견 제출**
 - 기 간 : 2025.04.24.-2025.05.07(14일)
 - 의견제출방법
 - 전 화 : 02-6251-8012 팩스 : 02-6251-7777
 - E-Mail : minikim@soulenergy.co.kr

※ 해당 사업관련 자료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료열람을 하실 수 있으시며 이동이 불편하신 경우 저희가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공고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 발전사업개요**
 - 발 전 소 명 : 산이태양광발전소
 - 발전소 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내양리 1712-3 (총 1필지)
 - 발전소 면적 : 7,877㎡
-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 발 전 용 량 : 998.75[kW]
 - 사업개시예정일 : 2028년 01월 이후
 - 사업운영기간 : 2028.02.01.-2048.01.31. (20년)
-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 (주)산이태양광발전 대표자 윤숙희
- 주민의견 제출**
 - 기 간 : 2025.04.24.-2025.05.07(14일)
 - 의견제출방법
 - 전 화 : 02-6251-8012 팩스 : 02-6251-7777
 - E-Mail : minikim@soulenergy.co.kr

※ 해당 사업관련 자료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료열람을 하실 수 있으시며 이동이 불편하신 경우 저희가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공고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 발전사업개요**
 - 발 전 소 명 : 산이태양광발전소
 - 발전소 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내양리 1712-1 (총 1필지)
 - 발전소 면적 : 8,215㎡
-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 발 전 용 량 : 998.75[kW]
 - 사업개시예정일 : 2028년 01월 이후
 - 사업운영기간 : 2028.02.01.-2048.01.31. (20년)
-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 (주)산이태양광발전 대표자 윤희희
- 주민의견 제출**
 - 기 간 : 2025.04.24.-2025.05.07(14일)
 - 의견제출방법
 - 전 화 : 02-6251-8012 팩스 : 02-6251-7777
 - E-Mail : minikim@soulenergy.co.kr

※ 해당 사업관련 자료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료열람을 하실 수 있으시며 이동이 불편하신 경우 저희가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